

# 4·24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하자



## 왜 선제 총파업인가

오늘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금속노조 지도부는 “국회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하고자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한걸음 더 나아가 “선제적” 4·24 총파업을 결정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공연히 선전 포고를 한 박근혜에 맞서, 공격이 관철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는 것이다.

“선제 파업”은 의미가 크다. “법안 상정 시” 또는 “경찰 침탈 시” 하는 식의 조건부 파업은 너무 뒤늦어 상황을 반전시키고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였다.

### 도약대

또 이런 조건부 파업 계획은 번번이 연기되거나 철회되면서 투쟁의 김을 뺏던 터라, 점점 더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 치기보다 선제적 파업에 나서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한다.

국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투쟁을 미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시간 끌기와 이를 통한 김 빼기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 4·24 총파업이 효과를 내려면, 단 하루일지라도 민주노총 소속 모든 노조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멈추고, 관공서를 멈추고, 마트를 멈추고, 학교를 멈춰야 한다. 이런 위력을 보인다면, 정부에 확실한 경고를 보낼 수 있고 조합원들은 다음 투쟁을 향해 전진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제동을 걸려면 하루 총파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활동가들은 4·24 총파업을 투쟁의 도약대로 삼아 그 이후 부문별 파업과 점거와 시위 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4월 총파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앞서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선제 총파업’을 만장일치 결의하고, 4월 24일로 날짜를 확정했다.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 노동계급 전체에 전면전을 선포한 지금, 민주노총의 각급 조직들도 하나둘씩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전교조가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4·24 연가파업을 결정했다.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도 4·24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제 민주노총의 핵심 대오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속노조의 동참은 4·24 총파업의 성공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있는 금속노조가 동참한다면, 총파업의 경제적·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파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더 센 놈이 온다”

박근혜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만큼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정부의 공격은 금속 노동자들도 정조준하고 있다. 임금 삭감과 파견 확대는 박근혜가 작심하고 밀어붙이려는 핵심 공격이다.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법정 노동시간을 늘리고,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 등을 통해 임금

을 삭감하라고 다시금 못을 박았다. 정부는 2월 26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 기준도 완화하고자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계획한 “저성과자” 해고는 박근혜가 추진하는 일반 해고요건 완화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이는 조선업·한국지엠 등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악랄한 공격이다.

그래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997년 IMF를 핑계로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보다 “더 센 놈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 기층 활동가들이 총파업 조직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한 총파업은 우리에게 사활적 과제다. 이는 단지 조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건 중요한 투쟁이다.

지금 박근혜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박근혜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초점을 형성하면서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힘있게 4·24 총파업을 결의하자. 그리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에 즉각 돌입하자.

특히 대의원들과 기층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4·24 총파업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총파업 성사를 위해 민주노총이 모집하고 있는 ‘총파업 실천단’에도 적극 참가해 지금부터 총파업의 기세를 끌어올리자!



## 전면전을 선포한 박근혜

# 각개격파 시도에 단결로 맞서자

박근혜 정부가 연말연시 쏟아낸 정책들은 노동자들을 향한 대대적인 전면전 선포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공세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박근혜는 집요하게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정상화’ 등 각 부문에 가해지는 공격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정부가 사활을 거는 만큼, 우리편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공격을 단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전술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우리 측의 대응 전술이다.

### 정규직-비정규직, 민간부문-공공부문의 단결

먼저, 박근혜는 사악하게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 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노동자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단결이 ‘공리’여서가 아니라,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직무성과급이나 저성과자 퇴출을 관철하면, 민간 기업주들이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이를 밀어붙이기가 더 쉬워진다.

### 사업장별 각개약진이 아니라

#### 대정부 단결 투쟁

또, 정부는 일부 공격은 법 개악을 통해 관철하려 하지만, 일부는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사업장별로 공격을 밀어붙여,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각

개약진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 노조는 크니까’, ‘단협으로 지키면 되지’ 하며 단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 개별 사업장별로 각개격파하려는 저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정부 방침에 반대해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

그래야 취업규칙 변경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미조직 노동자들을 방어할 수 있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

아무리 덩치 큰 노조도 고립돼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박근혜는 유노조 사업장을 ‘악의 축’으로 지목해 고립시키려고 노리고 있다. 잘 조직된 노조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걸고 선두에서 싸워야 지지를 받으며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를 위한 현장 발의안을 지지하며

## ‘8·18 합의’ 인정한 중집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이 2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거부하고 싸워 온 현대차 울산·아산 비정규직지회가 옳았음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열린 금속노조 38차 정기대의원대회 8·18 합의 폐기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시켰다. 당시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8·18 합의에 발목 잡히지 말고 투쟁하자는 쪽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런데도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8·18 합의를 인정해 후속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다. 금속노조 집행부와 중집이 8·18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38차 대의원대회 평가서’를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유감이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평가서가 ‘합의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대의원대회 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법리적 실효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대의원대회 결정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금속노조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의 정치적 정당성을 승인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중집의 문제 있는 평가서를 바로잡고, 다시금 8·18 합의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금속노조 차원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조직하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안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이것은 4월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실천하는 것은 박근혜의 파상공세에 맞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 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ws@wspaper.org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spaper.org>